

“일제, 조선 불교계까지 전쟁 동원·착취 일삼아”

심정섭 명예관장, 전남 해남 대흥사 주지 편지 공개

승려들 농번기 강제노역 내용 담겨…거부하면 처벌

일제가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 사회 전반을 총동원하는 과정에서 불교계 까지 강제 동원했던 실상이 당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승려들은 농번기마다 연 2차례, 한 달 기량 근로보국대로 끌려갔고, 동원을 거부할 경우 일본 순사가 동행해 체포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강압적인 처벌이 뒤따랐다.

1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 사백(83·광주 북구)은 전남 해남 대흥사 승려 근로보국대 동원과 관련된 자료 1점을 본보에 공개했다.

이는 가로 5.5cm, 세로 9cm 크기의 우편 엽서 형식 편지로, 대흥사 주지 혁전원웅(赫田元雄·본명 박영희)이 해남군 삼신면 장송택진(박진우)에게 보낸 것이다.

편지에는 근로보국대 강제 편성으로 인해 사찰이 떠안게 된 식량 공출 부담과 그로 인한 극심한 곤란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혁전원웅은 “근로보국원 1인당 쌀 3승(3되) 4.8~5.4kg)을 공출해야 한다고 하니, 저의 사찰 형편으로는 그 양조차 몹

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는 근로보국대원이 ‘식량을 지금받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사찰과 지역이 전쟁 수행을 위해 쌀을 상납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서의 작성 시점은 1944년 봄 이후로 추정된다. 같은 해 4월 10일 조선불교 조계종 종무총장 이종욱이 전국 31본사 주지에게 ‘조선불교 근로보국대’ 편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후 각 사찰은 승려를 근로보국대에 편입시키는 것은 물론, 동원 인원에 비례한 식량 공출까지 떠안았다.

근로보국대는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전시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며 만든 강제 노역 조직이다. 1938년 학교 근로보국대를 시작으로 대상은 12세 이상 40세 이하 전 조선인으로 확대됐고,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종교계까지 동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승려들은 봄·기울농번기에 맞춰 연 2차례, 약 한 달씩 도로 개설, 군수 시설 정비, 산림 작업 등 각종 전시 노역에 강제로 투입됐다.

동원은 ‘자발’이 아닌 명백한 강제였다. 출여 통지에 불응할 경우 일본 순사가 동행해 강제로 끌고 가거나 체포·구금됐고,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이 이뤄졌다. 불교계 역시 예외 없는 전시 통제 체계 안에 놓였던 셈이다.

편지를 작성한 혁전원웅은 복합적인 인물이었다. 전남 완도 출신인 그는 1930년 대 초 한글판 대선사가 조직한 항일 비밀 결사 ‘만당(만당)’에 참여했고, 1938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혹독한 고문을 당한 이력도 있다. 그러나 중·일 전쟁 이후 친일로 전향해 대흥사에서 ‘국위선양·무운장구 기원 법요식’을 열고 국방헌금과 군용기 헌납 운동에 앞장섰다. 이후 조선불교 조계종 종무원 이사를 맡아 일제의 전쟁 동원 정책에 협력했다.

광복 후 그는 건국공로훈장을 받았으나, 친일 행적이 드러나 2011년 국가보훈부에 의해 서훈이 취소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심정섭 명예관장은 “근로보국대는 노동 동원을 넘어 식량 공출과 사상 통제를 결합한 전시 수탈 시스템이었다”며 “승려들마저 농번기에 반복적으로 강제동원되고, 그 인원만큼 쌀을 바치도록 한 구조는 일제 수탈이 종교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가 1일 해남 대흥사 승려 근로보국대 동원과 관련된 자료 1점을 본보에 공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고작 800원…차량털이 구속

만년필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800원을 훔치려다 차주에게 땁 걸린 60대 남성이 쇠고랑.

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한 60대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차된 차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아.

당시 A씨는 차 내부에 있던 도장과 신용카드, 동전 800원을 가져갔다. 차주와 마주치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A씨는 후시경(사이드미러)이 접하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문이 잠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차량 관계자는 “비트코인 분실과 관련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암수수색”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있다. 관련 수사와 감찰을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안도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무죄

법원 “증거불충분 판단”

혐의 등을 받는다.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 매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 공모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문자 발송 등 본인 선거 운동에 대한 A씨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A씨에게는 장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0명 중 6명에게는 별금형(50만~200만원)이 판결됐다.

안 의원은 A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문

자매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

계인 10명에게 2554만원의 대가성 금품

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

로 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서울동부지검도…영치 담당 등 수사관 5명 현 근무지 정체불명 전자지갑 저장 확인…“경위 파악·회수 죄선”

광주지방법찰청이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암수수색을 보관하던 400억원대 비트코인 분실 사건을 두고 해남·순천지정과 수도권 소재 검찰청 등을 암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남·순천지정 등 검찰청을 대상으로 암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암수수색 영장이 접수된 곳은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순천지청, 서울동부지검이다. 암수비트코인 320.88개 분실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검도 암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암수수색 대상은 비트코인 분실 당시 광주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 중에는 분실사건 발생 시점으

로 지목된 지난해 8월 암수비트코인 인

수인계 과정에 참여한 전현직 영치 담당, 가상화폐 이해도가 높은 전문직 수사관 등이 포함됐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대법원이 이달 초 몰수를 확정한 범죄수익의 전부다.

해당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2021년 11월 불법 비트코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6·여)의 전자지갑을 암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A씨는 부친과 함께 2018~2021년 태국을 거점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대규모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이 암수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을 시도하다가, 정상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산을 탈취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분실과 관련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암수수색”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있다. 관련 수사와 감찰을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동구, 대자보 활성화·기후 위기 극복 실현

라온페스타·총장골목여행 연계 등 활성화 집중

사.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원행사, 11월 광복 80주년·학생독립운동기념일 연계 행사, 12월 군고구마 파티 등이 진행됐다. 해당 기간 방문객은 총 19만 2990명으로 집계됐다.

용역 결과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지역 상인이 참여한 벼룩시장을 비롯해 분필 아트존, 어린이·청소년 놀이터, 생활문화예술동아리와 청년 예술가 거리공연 등이 어우러지며 체류형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분석이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참여자에게 유인책을 제공한 점도 호응을 얻었다.

동구 관계자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사람이 중심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며 “시민·상인·단체가 주체가 되는 ‘자율적 문화공간’을 개방하고 전문화된 교통 통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4월부터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한다



광주 동구는 4월부터 11월까지(10월 제외)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금남로공원부터 전일빌딩245 앞까지 5차로 도로 540m(폭 3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6일 진행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 모습.

오는 4월부터 광주 금남로에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4월부터 11월까지(10월 제외)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금남로공원부터 전일빌딩245 앞까지 5차로 도로 540m(폭 3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 역사적 공간인 금남로를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돌려주고 탄소중립 실현,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유동 인구·매출 감소를 우려한 금남로 지하상가 등 주변 상인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라온페스타·총장골목여행 연계, 상인회 판매 부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시기 진행되는 총장 K스타젤린

지, 지하상가 문화의 날, 도깨비 장터 등과도 연계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형 걷자임’을 추진한다.

월별로 보면 선포식(4월4일)을 시작으로 어린이날(5월2일), 보훈(6월6일), 물놀이·야외 영화(7월4일·8월1일), 독서(9월5일), 연말 시상식(11월7일) 순으로 이어진다. 10월에는 ‘추억의 총장 촉제’ 일정(10월 7~11일)과 겹쳐 운영되지 않는다.

동구는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생활 실천을 일상 속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자전거·도보로 금남로를 찾은 시민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쉼터·북카페·친환경 체험장 등)과 버스킹·댄스

·동아리 등 거리공연 무대, 열린 공간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남대·조선대 미술대학과 협력해

학생 작품 전시·판매, 온누리상품권 지급, 차 없는 거리 굿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동구는 오는 6일까지 차 없는 거리에 대한 행사 운영 대행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동구는 대표 슬로건으로 시민·자전거·보행자 중심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사람이 중심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며 “시민·상인·단체가 주체가 되는 ‘자율적 문화공간’을 개방하고 전문화된 교통 통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